

제4차 유엔 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남 수 정 KoFID 간사

목 차

- I. 서 론
- II. 제4차 유엔 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내용
- III. 시민사회의 평가
- IV. 전망과 시사점
- V. 결 론

I. 서 론

1960년대 후반,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유엔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빈개도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900달러 미만에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은 이를 토대로 3년에 한번 최빈국 명단을 작성한다.¹⁾

2011년 현재 최빈개도국 숫자는 48개국(약 6억 3000만 인구)으로 1971년 24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최빈국으로 분류됐다가 최빈국 대열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1994년)와 카보베르데(2007년) 몰디브(2011년)가 유일하다. 특히 전체 최빈국중 33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대륙별, 지역별 부의 편중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최빈개도국 빈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차원의 회의가 198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회의²⁾를

1) 최빈국으로 구분되기 위해 수입, 인간지수, 경제지수등 모든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최빈국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회 연속상황이 개선되어야 함. 최빈국심사대상국가는 인구 7천 5백만명 이하인 나라에 한함. www.unohrrls.org 참조

2) 1차 파리회의의 결과문서는“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SNPA) for LDCs for the 1980s”이며 2차 파리회의결과문서는“Paris Declaration and the Programme of Action for LDCs for the 1990s”

시작으로 10년에 한번 열리고 있다. 올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4차 회의³⁾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1년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 및 행동 계획(Brusse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 BPoA)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최빈국 개발지원에 관한 비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3차 회의 당시 NGO포럼이 병행하여 개최되었는데 이는 유엔 차원에서의 최빈국 논의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제시민사회는 LDC Watch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최빈국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옹호 및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4차회의 기간 중에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여 브뤼셀 행동계획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제4차 유엔최빈국회의의 주요내용을 지난 3차 브뤼셀 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국제시민사회의 평가를 중심으로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최빈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제4차 유엔 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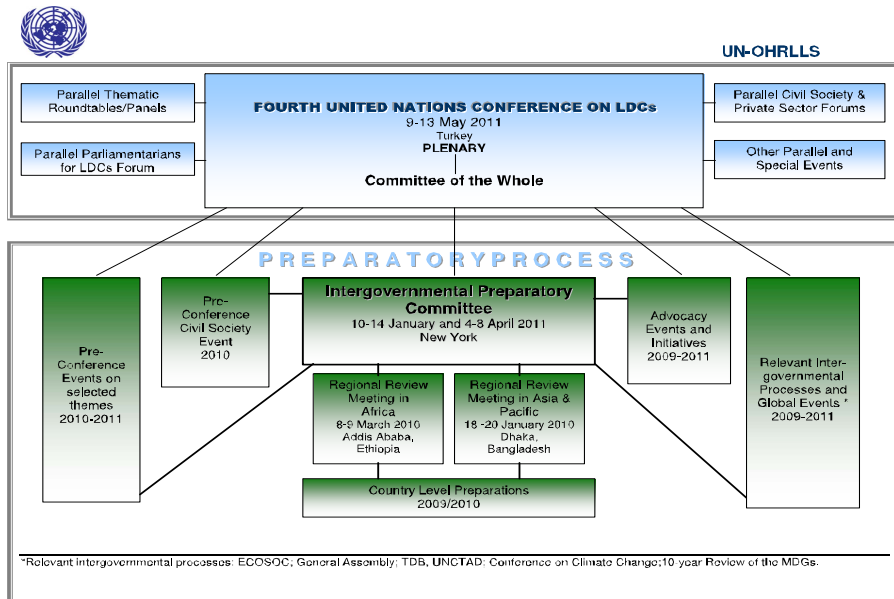
1. 4차회의 개요

제4차 최빈개도국회의는 유엔총회의 임명에 의해 UN 최빈국·내륙국·소도서국 대표사무소인 UN-OHRLLS⁵⁾이 전체코디네이션을 담당하였다. 4차 회의에 앞서 최빈국 정부 및 국회, 국제기구,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차원으로 브뤼셀 행동계획 추진 성과를 파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 관련한 프로세스는 지난 10년간 CSO 차원의 LDCs 논의를 주도해 온 LDC Watch가 주축이 되어 준비되었고 본 포럼을 위해 국가별 컨설팅이션 및 최빈국회의 준비를 위한 정부간 준비위원회와의 공청회 개최, 권고안 제출 등 일련의 정책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LDC Civil Society Assembly라는 것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의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으로 아시아 선언(Asia Declaration)을 내놓은 바 있다.

3) 4th UN Conference on Least Developed Countries

4) 사무국은 네팔의 RRN(Rural Reconstruction Nepal)이 운영하고 있음. LDC Watch 운영위원회는 네팔, 캄보디아, 세네갈, 이디오피아, 벨기에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

5) UN-OHRLLS(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는 유엔회원국 중 최빈국, 내륙국, 소도서국의 특수한 개발수요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1〉 UN LDC-IV의 준비과정(출처 : http://www.un-ngls.org/IMG/pdf_roadmap.pdf)

LDC-IV 행사는 정부간 트랙(Intergovernmental Track), 고위급 주제토론(High Level Interactive Thematic Debates)⁶⁾, 민간트랙(Private Track), 특별행사(Special Events)로 구성되었고 CSO 포럼은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등의 행사등과 함께 특별행사의 형태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CSO 포럼 개최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빈곤과 싸울 수 없고 시민사회는 이를 위한 파트너이자 협력자이며 정부 - 비즈니스 커뮤니티 - 시민사회 의 삼각 협력관계가 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 결과문서 협상과정

이스탄불행동계획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것은 무역과 개발재원 특히 ODA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미국, EU를 비롯한 서구진영은 무역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반면 77그룹(Group of 77, G77)⁷⁾ 측은 최빈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duty free quota free)혜택 부여, 누적 원산지 규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⁸⁾,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6) 고위급주제토론의 주제는 다음의 6가지 : 1. Enhancing Productive Capacities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s in LDCs 2. Resource Mobilization for LDC's Development and Global Partnership 3. Harnessing trade for LDC's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4. Good Governance at all Levels 5. Reducing Vulnerabilities, Responding to Emerging Challenges and Enhancing food security in LDCs 6.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7) <http://www.g77.org/>

관한 협정⁹⁾에서 최빈국에 대한 특별 대우 등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와 관련하여 공여국측은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행동계획상의 기존 공약인 GNP대비 0.2% 수준에 머물 것을 고수하였으나 77그룹측은 GNP대비 0.3%로 확대하기 위한 리뷰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77그룹은 1964년 제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시 공동선언 채택에 동참한 77개 개발도상국 그룹을 지칭한 것으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간 의견을 조율하고, 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130여개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 77그룹의 멤버였던 국가들이 G20이나 BRICS에 합류함에 따라 77그룹의 협상력이 현격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LDC국가들도 77그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범당시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UNCTAD가 LDC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주장하고 있는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Architecture(NIDA)¹⁰⁾는 이스탄불행동계획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탄불 행동계획 149조에 따르면 UNCTAD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즉 무역과 개발 이사회를 통한 정부간 컨센서스 형성 및 LDCs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등을 계속하라는 권고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과 관련 하여 최빈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inclus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growth)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ara40)

4. 이스탄불행동계획

4차 회의의 결과문서인 이스탄불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s, IPoA)은 생산역량, 농업 및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무역, 상품 다변화 및 변동성 완화, 인간 및 사회 개발, 위기대응, 개발 및 역량구축을 위한 자원 동원,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8개 분야(priority areas for action)¹¹⁾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원칙¹²⁾으로 국가의 주인의식과 리더십, 통합적 접근, 진정한 파트너십, 결과 중심의 접근, 평화와 안보 및 개발과 인권, 평등, 모든 차원에서의 참여, 국가와 시장의 역할 균형 등을 설정하였다.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인간중심(people-centered)의 정책프레임워크 설정, 바람직한 거버넌스, 인

8)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9)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10) UNCTAD는 NIDA를 위해 다음의 5가지를 개혁이 필요한 주요축으로 제안 : 국제금융체제, 다자주의 무역레짐, 국제상품정책, 국제지식체제, 기후변화레짐(finance, trade, commodities,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11) Priority areas for action :A. Productivity capacity, B.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C. Trade, D. Commodities, E.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F. Multiple crises and other emerging challenges, G.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ad capacity, H. Good governance at all level

12) (a) Country ownership and leadership (b) An integrated approach (c) Genuine partnership (d) Result orientation (e)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 Equity at al levels (g) Voice and representation (para29)

적·제도적 역량개발, 생산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무역의 역할 강화, 환경보호, 개발재원동원 등을 최빈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7개 분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빈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철폐, 최빈국 부채경감, ODA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이행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지원금액, 시한 설정 등은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노정한 바 있다.

BPoA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연계하는 정책프레임워크 수립을 강조했으나 이행평가보고서¹³⁾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국가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최빈국의 꾸준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차회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위기대응¹⁴⁾이 새롭게 우선순위 분야로 등장했고 주요원칙으로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평등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국제사회 정세 변화를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국가간, 국가내 불평등 문제와 2008년부터 중첩되어온 각종 위기(식량, 금융, 환경, 에너지)는 다시 한번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중동에 불어온 자스민 혁명바람은 유엔의 기본 가치인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3차회의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고려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해 국가와 시장의 역할 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영역(Private sector)이 개발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1〉 브뤼셀행동계획과 이스탄불행동계획 비교

	우선순위	주요원칙
브뤼셀 행동계획 (2001-20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중심의 정책프레임워크 2. 바람직한 거버넌스 3.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4. 생산역량강화 5. 개발을 위한 무역의 역할 강화 6. 환경보호 7. 개발재원동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적 접근 2. 진정한 파트너십 3. 국가의 주인의식 4. 시장의 역할 고려 5. 결과 중심의 접근
이스탄불 행동계획 (2011-20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역량 2. 농업 및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3. 무역 4. 상품 다변화 및 변동성 완화 5. 인간 및 사회 개발 6. 위기대응 7. 개발 및 역량구축을 위한 자원 동원 8. 바람직한 거버넌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주인의식과 리더십 2. 통합적 접근 3. 진정한 파트너십 4. 결과 중심의 접근 5.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6. 평등 7. 모든 차원에서의 참여 8. 국가와 시장의 역할 균형

13) UN LDC-IV & UN-OHRLLS,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russels Programme of Action, 2010

14) Multiple crises and other emerging challenges : Economic shocks, Climate chang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isaster risk reduction

III. 시민사회의 평가

“깨어진 약속” 최빈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년전 약속 이행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이다. 국제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 최빈개도국 개발원조의 파트너 국가(소위 선진국)들이 테러와의 전쟁, 무역 자유화, 자원 확보 등에 열을 올리느라 불균등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가속화 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LDC-IV 결과문서에서 주지하듯 인간 및 사회개발을 위한 목표라던지 시장접근에 대한 조기자유화(early harvest)에 대한 공약, 그리고 불법적인 자본 유출문제 해결과 부채탕감에 대한 국가들의 의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스탄불행동계획은 향후 10년간 최빈국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는 4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불과 할 뿐 이다.

LDC Watch, CIVICUS, BetterAid, Social Watch, South Centre 등은 4차 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LDC Watch는 4차회의 기간중에 열렸던 시민사회포럼의 결과문서로 이스탄불선언을 발표했다.¹⁵⁾ 다음은 브뤼셀행동계획 이행과 이스탄불행동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이다.

1. 총평

시민사회포럼의 결과문서인 이스탄불선언은 시민사회가 유엔 최빈국회의의 프로세스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결과문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UNCTAD가 출간한 LDC 2010보고서에서도 보여주듯이 브뤼셀 행동계획에서 약속한 적절한 양의 원조와 불공정한 무역 규제의 개혁, 외채탕감과 LDCs에 대한 역량강화 등에 대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최빈국빈곤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즉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발 체제는 부자와 빈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최빈개도국 회의가 정의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스탄불행동계획이 이러한 변화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스탄불행동계획이 세부 목표와 이행 장치 및 시한 등을 명시하지 못했고 새천년정상회의 등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넘지 못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에 같은 수준의 의무를 수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종 위기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막대한 짐을 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최빈국 문제에 대한 접근이 최빈국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15) www.ldcwatch.org 참고

유엔의 기준에 따라 가난의 정도를 구분하지만 최빈국도 어떤 면에서는 부의 범주에 들 수도 있다. 공동체의 결합력, 천연자원, 문화적 다양성, 인적자원 등의 부분에서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발전 요소들을 갖고 있다.

2. 생산역량

시민사회는 이스탄불행동계획이 생산역량 배양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최빈국들이 그간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정책에 주력하느라 국내 산업기반 확충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계획이 최빈개도국 개발은 공여국이나 민간영역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함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노동자, 소비자, 환경 보호 및 규제 방안 없이 민간영역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행동계획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재정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3. 농업 및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최빈국 정부들은 최근 글로벌 식량위기를 겪으며 농업부문과 식량안보 개선을 식량안보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함을 주장한다. 식량안보개념은 일국의 국민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즉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할뿐 그 식량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식량주권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최빈개도국의 농업 관행에 의해 뒷받침 되고 소작농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무역

최빈국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 수준이고 최빈국 인구의 50%가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시민사회는 최빈국의 수출주도의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상품의존성을 높이고 탈산업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사회경제적 주변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협약과 같은 개도국 특혜 및 우대조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진영은 최빈개도국회의에서 통상문제를 분리하여 다루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5. 인간 및 사회개발

시민사회는 최빈개도국 정부가 정책 형성과 결정,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여성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최빈국 출신의 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언급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강제노동과 성착취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간개발 중에서도 특히 교육이 최빈개도국 시민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이며 교육을 통해 이들이 경제, 사회,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등,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추가 이행장치가 필요하다.

6. 위기대응

시민사회는 최빈국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고 선진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최빈국 사람들은 식량, 물, 에너지, 금융, 기후 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빈국은 천연자원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재해발생 이후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역량도 부족하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는 최빈국의 자원수출, 민간 및 공공재원조달, ODA, 해외송금 유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7. 개발 및 역량구축을 위한 재원동원

최빈국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로 줄곧 0.08%~0.1%에 머무는 등 뚜렷한 증감이 없고 MDGs 8의 세부목표인 0.15%와도 차이가 있다. 반면 최빈국들이 지고 있는 외채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600억불로 총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LDCs에 대한 원조 중 55%가 8개 국가¹⁶⁾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LDC에 대한 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이 구체적이고 달성 시한을 두고 측정가능한 공약이어야 하며 국제인권 규범과 성평등 관점을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6)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수단, 모잠비크, 우간다, 방글라데시, 콩고

IV. 전망과 시사점

그렇다면 시민사회에 주어진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이스탄불선언과 행동계획이 담고 있는 목표와 계획들이 원칙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해야 한다. IPoA에서도 공약 이행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특히 LDCs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LDCs가 IPoA를 국가 정책으로 통합해야 하며 정기적인 이행 검토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UN 경제 사회이사회(ECOSOC)가 공약 이행 및 진전 사항에 관한 모니터 및 평가를 담당할 것을 위임받았다. 또한 UN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UN 시스템이 IPoA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에 있어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LDC Watch는 UN시스템 내에서 최빈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에 4차 회의 결과 이행에 대한 로비활동과 더불어 국가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¹⁷⁾ 한국시민사회 또한 외채탕감문제를 비롯 무역, 이주, 환경, 여성 등 LDCs 빈곤문제 해결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약을 지켜나가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개발패러다임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는 OECD가 주관하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개최 될 예정이고 내년 6월에는 유엔의 리우지속가능발전회의(Rio+20)가 예정되어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행사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하였듯 G20에 대한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최빈국 지원을 G20 장기적 의제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4차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최빈국에 대한정책 방향과 관련, 향후 5년간 최빈국 및 취약국가에 대한 ODA를 40%까지 증대¹⁸⁾,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 확대하는 등 2012년까지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전면 비구속화,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역량 지원 등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국내외 시민사회는 최빈국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40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빈개도국 없는 세상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7) 탄자니아, 르완다, 세네갈 등

18) 한국의 2008~2009년 양자간 ODA중 최빈국 지원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GNI대비 최빈국 ODA비율은 0.03%에 그쳐 몬테레이 선언에서 합의한 목표치인 0.15~0.2%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진희, MDGs Goal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현황, 수출입은행 한국의개발협력, 2011년 1호

남수정, “LDCs 없는 세상을 위하여” ODA Watch 뉴스레터 제54호, 2011년 6월 1일

남수정, 제4차 유엔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수출입은행 한국의 개발협력, 2011년 2호

권율, 정지선 “UN 최빈개도국 회의의 개최배경과 대응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1 No. 14)

민동석 차관, 전 세계 ‘최빈개도국’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년 5월 12일

2. 국외문헌

UN NGLS, e-Roundup, Istanbul Plan of Action for the LDCs : 2011-2010, July 2011

UN-OHRLLS, Brussels Programme of Action, May 2001

UN-OHRLLS,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May 2011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0

UN LDC-IV &UN-OHRLLS,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russels Programme of Action, 2010

The LDC Civil Society Forum, Towards a World Without LDCs, May 2011

South Centre Statement by Martin Khor, Executive Director, South Centre at the high-level panel on Trade, LDC-IV, 10 May 2011

The LDC Civil Society Forum, Civil Society Istanbul Declaration, 13 May 2011

CIVICUS press releaseby David Kode, It's time for a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13 May 2011